

배출업소 단속권한 일원화

환경부는 안정적인 식수원 확보 및 배분을 위해 식수원 전용댐, 갈수조정댐을 개발하는 등 수계별 물관리시설의 설치와 관리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또 배출업소에 대한 체계적이고 일관성있는 지도 단속을 위해 현재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환경관리청으로 이원화돼 있는 지도단속권한을 지방자치단체로 일원화할 방침이다.

환경부는 6월 지자체 선거를 계기로 지방화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환경정책이 일대 전환기에 직면하게 될 것에 대비, 환경행정을 효율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이같은 방향으로 환경부 및 산하기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전면 재조정기로 했다.

환경부는 우선 해마다 되풀이되고 있는 식수난을 원천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가뭄취약지역 수계에 식수원 전용댐과 갈수조정댐 등을 건설, 환경관리공단에서 관리토록 할 방침이다.

환경부 고위관계자는 현재 9개 다목적댐으로는 안정적인 식수원확보에 한계가 있다면서 비교적 물이 깨끗한 하천 지류에 하루 방류량 5만~10만t 정도의 소규모 식수전용댐을 건설, 송수관을 통해 수도물 원수를 공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 갈수조정댐의 경우 갈수기 하천유지용수를 확보, 일정수준의 수질을 유지하기 위해 한정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라면서 올해말까지 기초조사를 거쳐 내년 중 타당성 검토에 들어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배출업소 지도단속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현재 지방환경관리청이 맡고 있는 영등포 기계공단, 대구비산염색공단, 반월공단 등 국가공단에 대한 지도단속업무를 지방자치단체로 다시 이관키로 했다.

이에 따라 지방환경관리청의 국가공단 지도단속권한은 지난해 초 낙동강 수질오염사고를 계기로 범정부 차원에서 마련된 수질관리 개선대책에 따라 지난해 5월 지자체에서 환경부로 이관된지 1년여만에 다시 지자체로 넘어가게 됐다.

환경부는 특히 이번 조치에서 환경관리공단의 기능을 대폭 강화, 공단내 폐수중말처리장 등 환경기초시설의 수탁업무를 배제하는 대신 △ 지자체 환경기초시

설 설치 및 운영관리 지원 △ 환경오염방지기술지원 및 진단 △ 환경기초시설 운영요원 현장교육 및 양성 △ 기업환경경영 인증업무 △ 수계별 물관리시설 설치 및 관리 등에 주력하도록 했다.

또 지방환경관리청의 경우 지자체에서 추진하는 각종 개발사업에 대한 협의·조정업무와 환경기초시설의 설치 및 운영관리사업에 대한 지도감독업무를 총괄토록 해 관내 환경관리의 중추적인 역할을 맡도록 했다.

아울러 국립환경연구원에 대해서는 지자체 환경관리에 필요한 환경기초자료를 제공, 지원하는 한편 환경조사연구업무를 강화하고 현재 지방환경관리청과 함께 실시하고 있는 수질검사업무를 산하 수계별 수질검사소에서 맡도록 할 방침이다.

환경부는 이같은 계획을 관계부처와 6월말까지 협의·확정할 계획이다.

'환경안전진단의 날' 지정

환경부는 5월 26일부터 매주 금요일을 '환경안전진단의 날'로 지정, 오염물질 배출업소들이 자체적으로 환경관련시설 및 장비운영상태를 점검토록 했다.

환경부는 우선 1일 5백t 이상 폐수를 배출하는 대형업소와 유독물 제조·취급업소, 폐기물·폐수처리업소 등 모두 5천4백30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환경안전진단을 시행토록 각 시, 도 및 지방환경관리청에 시달하는 한편 경제5단체장에게도 협조를 요청했다.

환경부는 지방환경관리청, 지방자치단체, 경찰 등과 합동으로 정기안전진단 이행 여부를 점검, 미 실시 사업장에 대해 특별점검을 실시하는 등 행정지도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밖에 오폐수 및 하수처리장 등 환경기초시설과 쓰레기 매립·소각장 등 9백41개 시설에 대해서도 매주 금요일마다 안전진단을 실시하도록 각시도에 시달했다.

환경부는 최근 대구가스폭발사고와 같은 대형안전사고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환경시설이 점차 대규모화, 다양화되고 있는 점을 감안, 사고 예방을 위해 사업자 스스로 안전진단을 실시하도록 했다.

환경부는 또 매주 실시되는 안전진단은 부서단위로, 월간단위에는 관련부서 합동으로, 분기별 정밀진단에는 전문기관을 활용토록 하는 등 안전진단체계를 단계적으로 강화토록 했다.

환경부는 각 시도 및 지방환경관리청에 안전진단결과 및 개선내용을 수시로 확인, 우수기관 및 업체를 발굴해 포상토록 했다.

배출업소 전산화작업 완료

전국 2만6천7백여개 폐수배출업소에 대한 전산화작업이 완료돼 앞으로 특정지역 오염사고발생 때 배출오염원 추적이 훨씬 쉬워진다.

이들 전체 배출업소가 하천 바다로 방류하는 폐수량은 하루 2백31만6천톤으로 영산강의 하루 평균유량 1백91만5천톤보다 20%나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환경부는 최근 폐수를 배출하는 전국 2만6천7백2개 업체의 업소위치, 용수사용량, 폐수발생량, 폐수의 농도, 방지시설현황 등 65개 항목에 대한 전산화작업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산업폐수에 대한 정부의 감시·감독기능이 대폭 강화됨으로써 수질오염의 주원인인 사업장 폐수량이 줄어드는 효과를 가져오게 되며 이 전산화 자료는 산업입지 선정이나 공단조성때 환경성 검토의 근거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전산화된 이들 자료는 또 폐수배출업소 관리체계 개선이나 4대강 권역별 수질관리대책 등 각종 수질개선 정책자료로도 쓰이게 된다.

이번 전산화작업에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폐수를 발생하는 포항제철에서부터 폐수를 소량 배출하는 사진관이나 세탁소 등 전국의 모든 폐수배출업소가 포함됐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 데이터 베이스를 기초로 원하는 분야별로 얼마든지 응용자료를 뽑아볼 수 있어 폐수관련행정이 크게 과학화됐다』고 밝혔다.

예를 들어 카드뮴이 들어 있는 폐수배출업소, 수질기준치를 위반하는 상습위반업소의 명단 등을 손쉽게 작성, 대책을 수립할 수 있게 됐다.

한편 이번 전산화 작업분석결과 폐수배출업소를 지역별로 보면 △ 경기도 4천5백35개 △ 서울 3천2백36개

△ 경남 2천9백89개 △ 부산 2천1백14개 △ 경북 2천 61개 등 순으로 나타났다.

폐수방류량은 △ 경남이 하루 43만7천톤 △ 경기 41만1천톤 △ 경북 34만톤 △ 전남 16만2천톤 △ 대구 16만톤 등 순으로 나타났다.

주요수계별로는 동해로 쏟아진 폐수방류량이 하루 평균 52만8천톤으로 가장 많았고 낙동강 39만톤, 한강 35만톤, 남해 28만톤, 서해 27만톤, 금강 15만톤 등으로 조사됐고 업체별로는 삼화화성이 9만2천8백톤으로 1위였고 2위는 한주 7만5천9백톤, 3위는 포철 7만3천7백톤 등이었다.

환경경영 시범기업 후보선정

환경경영 시범기업으로 육성될 후보업체가 선정됐다.

공업진흥청은 지난 5월 16일 금년말까지 지도를 실시할 경우 국제환경경영 규격인 ISO 14000에 적합한 환경친화적 모델로 육성할 것으로 판단되는 41개 업체를 최종 확정했다.

공진청은 시범기업을 희망한 54개 기업체의 공장에 심사원을 투입해 경영자의 실천의지, 환경경영자원 확보와 지원능력, 환경경영관행 등 모두 2천6백개 항목에 대해 정밀 심사를 실시, 1백점 만점에 50점 이상을 획득한 기업을 중심으로 대상업체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들 업체를 업종별로 보면 화학 18개, 기계 8개, 전기·전자 7개이며 철강 건설 식품 호텔 엔지니어링 공공서비스 섬유염색 등의 분야에서도 각각 1개씩 포함됐다.

공진청은 이들 대상기업에 전담 지도기관과 심사원을 배정, 이달부터 10월 까지 ISO 14000인증획득이 가능한 수준까지 집중적으로 육성할 계획이다.